연구자료 22-17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박영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 구 자 료
22-17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박영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자료 22-17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인 쇄 2023년 4월 21일
발 행 2023년 4월 28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비매품
ISBN 978-89-322-2499-2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안보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대략 '① 비즈니스 사이클 충격(business cycle shock)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②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③ 금수조치(embargo)에 대한 회복력' 등의 의미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소 냉전의 종식 이후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화(globalization)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후생을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하지만 2016년경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 자유무역의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무렵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현재 무역 분야를 넘어서 군사, 안보, 첨단 기술의 영역까지도 미중 분쟁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의 맥락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무역 및 경제정책들을 집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자유무역이 축소되고 보호무역 기조의 정책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과 관련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분쟁은 미국의 국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Ricardo가 지적했듯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 생산 및 교역은 각 교역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

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간 무역확대로 후생이 증대된 경제주체들(winners)도 있는 반면 후생이 오히려 감소된 경제주체들(losers)도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권은 미중 간 교역 확대로 후생이 감소한 경제주체들(유권자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간 무역의 증대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가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정치경제학 문헌의 일관성 있는 분석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협상이론 분석을 다룬 문헌은 국제관계에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결정에 대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협력이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분쟁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예: 국가, 지역 공동체 등) 간에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경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군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경제제재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안이나 규제 등을 적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제제재는 대부분 독재체제 국가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제재 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경제제재가 의도한 바와 달리 반독재 세력의 권한을 감소시켜 독재자의 권한이 더욱 증가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형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는 제재 당사국의 군사적 자원 (상대적) 사용량을 감소 시키며, 정치 엘리트 계층에 분배되는 민수용 자원의 (상대적) 배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제제재가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고 반독재 세력의 영향력을 줄여 독재 정권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는 2016년 무렵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분쟁의 원인을 설명할 논리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찾아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추가로 미중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가 간 무역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와 국제분쟁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정치경제학 문헌을 살펴본다. 이어서 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제재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며 본고를 마무리한다.

차례

국문요약 ····· 3

제1장 서론 ····· 9

제2장 국제분쟁과 무역 ····· 11

1.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 11
2.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국제분쟁 ····· 15
3. 소결 ····· 19

제3장 경제제재 ····· 21

1. 경제제재의 정의와 개요 ····· 21
2. 경제제재에 관한 이론 모형 ····· 23
3. 소결 ····· 29

제4장 결론 ····· 31

참고문헌 ····· 34

Executive Summary ····· 37

그림 차례

그림 2-1. 미국 제조업 고용량 추이(1948~2022년) ····· 11
그림 2-2. 미국 노동시장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12
그림 2-3. 미국의 약물중독, 자살 및 알코올 관련, 간질환 관련
사망률 추이 ····· 12
그림 2-4.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지역별 노출도 ····· 14
그림 3-1. 경제제재의 집행 빈도 추이 ····· 22

제1장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안보의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대략 '① 비즈니스 사이클 충격(business cycle shock)에 대한 회복력(resilience)', '②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혹은 '③ 금수조치(embargo)에 대한 회복력' 등의 의미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전 세계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화(globalization)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후생을 지속적으로 증대해왔다. 하지만 2016년경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 자유무역의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무렵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 현재 무역 분야를 넘어서 군사, 안보, 첨단 기술의 영역에까지도 미중 분쟁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의 맥락에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무역 및 경제정책들을 집행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많은 나라에서도 자유무역이 축소되고 보호무역 기조의 정책들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과 관련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미국과 중국은 점진적으로 외교관계의 폭을 넓히다가, 1979년 미국 카터 행정부 시기에 미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맺게 되었다. 이후 양국은 점진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켰으며, 2000년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항구

적 정상 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나, 2016년 무렵 양국간에 무역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리카도의 비교우위 개념에 입각한 오래된 무역 이론에서 생각해보면, 각 국가가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특화해서 교역을 하면 양국 모두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자명하며,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의 자유무역 확대와 세계화의 심화를 통한 세계경제의 성장으로 리카도의 이론은 실증적으로도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앞서 서술했듯이 2016년경 시작된 미중 무역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으로 격화되었으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화 34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1]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타국과의 외교 및 통상정책을 미국 내 실업률 문제와 산업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결부시켜 집행하기 시작한 정황들도 보인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국내정책과 외교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기조는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고의 2장에서는 2016년 무렵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분쟁의 원인을 설명할 논리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찾아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추가로 미중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국가 간 무역을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와 국제분쟁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정치경제학 문헌을 살펴본다. 이어서 3장에서는 최근 경제안보 개념의 대두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집행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제재에 대한 정치경제학 이론 분석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고의 결론을 제시하며 본 연구자료를 마무리한다.

---

1) "Trump's Trade War With China Is Officially Underwa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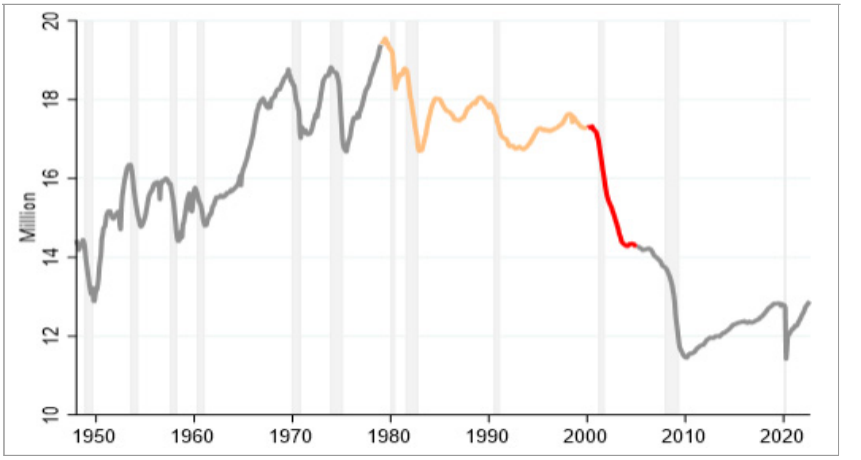
제2장 국제분쟁과 무역

1.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고찰

먼저 미국의 경제 지표 추이를 살펴보자. [그림 2-1]은 194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내 제조업 고용 자료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 중국에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한 2000년 이후 미국 내 제조업 고용량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그림 2-1. 미국 제조업 고용량 추이(1948~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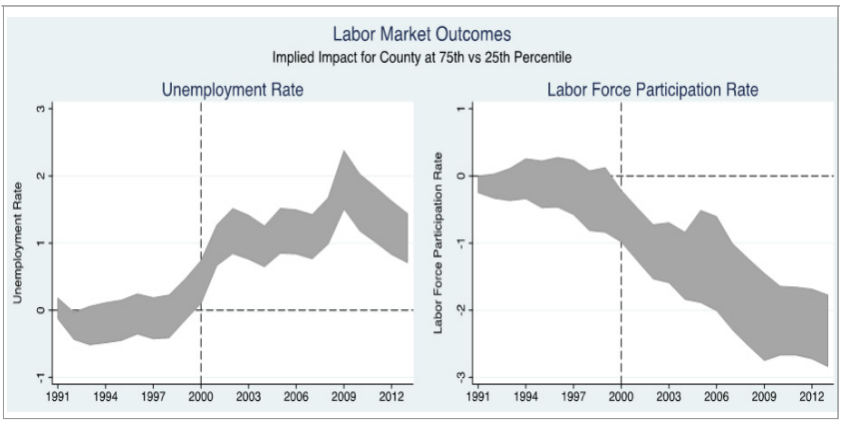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Schott(2023), 전문가 간담회 자료.

[그림 2-2]는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노동시장 주요 지표들을 보여주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한 2000년을 기준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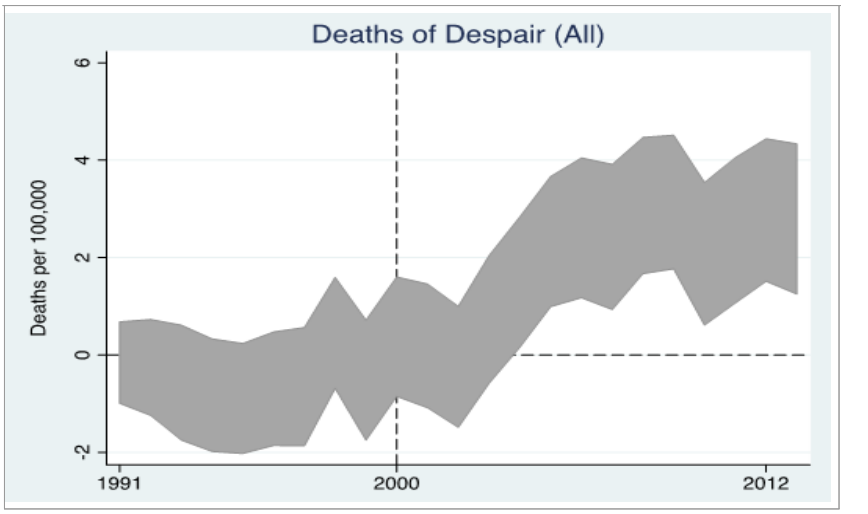
그림 2-2. 미국 노동시장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자료: Schott(2023), 전문가 간담회 자료.

마지막으로 [그림 2-3]은 미국에서 약물 오남용(중독), 자살 및 알코올과 관련된 간질환 사망률 추이를 나타내는데, 역시 2000년을 기준으로 관련 사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 미국의 약물중독, 자살 및 알코올 관련, 간질환 관련 사망률 추이



자료: Schott(2023), 전문가 간담회 자료.

위의 자료들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이 중국에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한 2000년 이후로 미국 내 제조업 불황이 심화되고,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내 정치적 대응의 맥락에서 대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즉, 미국이 기존에는 국내 문제와 외교통상 문제를 분리해서 다뤘다면, 최근에는 미국 내 문제가 미국의 외교통상정책의 방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Pierce and Schott(2020)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지위 부여가 미국 내 각 지역에 미친 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표를 개발했다.

$$NTR\,Gap_j = Non\,NTR\,Rate_j - NTR\,Rate_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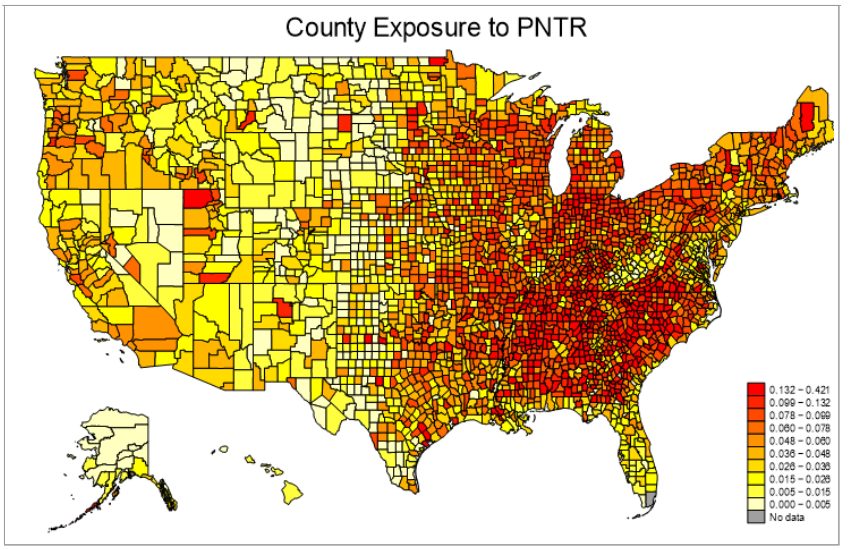
위의 식은 미국의 산업별(j)로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 부여 이전 관세율($Non\,NTR\,Rate_j$)과 이후 관세율($NTR\,Rate_j$)의 차이를 계산한다. $NTR\,Gap_j$가 클수록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은 산업일 것이라는 가설 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지역별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NTR\,Gap_c = \sum_j \left(\frac{L_{jc}}{L_c} \right) NTR\,Gap_j$$

위의 식에서 L_{jc}/L_c는 시군구 단위 지역 c의 고용량 중 산업 j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NTR\,Gap_c$는 여기에 $NTR\,Gap_j$을 곱하여 모든 산업별로 합한 값이다. 다시 말하면, $NTR\,Gap_c$는 미국의 시군구 단위 지역 c의 고용에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변화가 미친 영향을 계측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4]는 위의 지표를 미국 시군구 지역별로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2-4.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지역별 노출도



자료: Caliendo and Parro(2022).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노출이 큰 지역들은 주로 이른바 '러스트 벨트(rust belt)'라고 불리는 미국 내 주요 산업 공동화 지역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자료들로 비추어 보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확산하면서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부상하게 한 주요 사건인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은 경제학적 논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미중 분쟁을 설명할 경제학적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문헌은 존재한다. 미중 관계의 역사를 매우 간략히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양국의 수교와 교역 증대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성장한 이후 다방면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 서술할 수 있다. 조금 더 일반적으로는 국가 간 무역의 증대와 분쟁 간의 가능성의 관계로 요약할 수 있으며, 본 장의 다음 절에서 이에 대한 경제학의 문헌을 살펴보면서 무역과 분쟁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국제분쟁

Hirshleifer(1988)는 분쟁과 협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국가 간 분업 관계와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economic interdependenc)의 증가가 국가 간 분쟁을 일으킬 유인을 줄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해볼 수 있다. 국가 간 협력으로 생산적 협업 관계가 증대되어 전쟁이 더욱 파괴적 효과를 불러온다면, 각 국가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자원을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고 점점 더 적은 자원을 군사적 활동에 투입하게 될 것인가?

Hirshleifer(1991)는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 국가 간 무역 증대와 협력 관계 확대가 역내 분쟁 및 전쟁의 위험을 방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대되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그 믿음은 깨지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 분쟁 상황뿐만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도 유효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한 이후 지난 30년간 대중 수출액이 160배가 넘게 성장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약 5.2배 늘었으며, 대일 수출액이 약 2.4배 성장한 것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순위로 보면 중국은 2003년부터 20여 년간 계속 수출액 기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Hirsheifer(1988, 1991)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국제분쟁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미중 분쟁의 가운데에 놓인 한국의 상황에서 질문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미중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서방진영과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이로써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흐름이 크게 꺾이고 있는 시기에, 한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흐름처럼 대중 교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계속 증대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이러한 질문은

한반도의 남북관계에도 고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역내 긴장을 지속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남북 간 분쟁과 전쟁을 필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볼 수 있다. 본장에서는 국제분쟁과 무역에 관한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로널드 코즈(Ronald Coase)가 제시한 '코즈(Coase)의 이론'에 따르면, 경제 내 사람이나 기업 혹은 국가(경제주체) 간에 상호 이득이 되는 협력의 기회가 존재한다면 누구나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취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제 내에 어떤 분쟁(conflict) 상황이 존재할 때,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상(bargaining)' 상황에서 협상 당사자 간의 협상 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협상 당사자들은 그들에게 상호 더 나은 상황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들 간의 협상만으로 그들이 더 나은 상황(혹은 분쟁이 해결되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상황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해결하고 서로 이득이 되는 지점을 협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다면 두 국가가 공동으로 평화롭게 무역을 지속하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코즈의 이론이 잘 작동한다면, 국가 간 평화적 협력과 협상은 거의 언제나 가능할 것이므로 국가 간의 큰 분쟁이나 대립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는 경제주체의 노력(경제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2] 첫째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생산 활동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활동 등의 일반적인 생산 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다른 경제주체가 창출해서 소유한 경제적 재화를 전유 혹은 착복하려는 활동이다. 이는 경제 활동의 암적인 면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예를

2) Hirshleifer(1994), pp. 1-10.

들면 국제적 대치나 전쟁, 파업, 범죄 등이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 현실의 경제는 코즈의 이론과 파레토가 지적한 경제 활동의 암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유재산권의 법적인 보호와 계약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는 사법 체계는 코즈의 이론이 잘 작동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분쟁 상황에 놓인 이해 당사자들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협상 결과물(계약)이 잘 이행되려면 먼저 분쟁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재산권(혹은 소유권)이 명확해야 하며, 또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확실하게 이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만약 탄탄한 사법 체계가 부재하다면 경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 상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재산을 빼앗는 위력에 의한 전유와 착복 시도가 횡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국한된 문제에는 각 국가별로 일정 수준의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별로 사법 체계 정립의 수준은 상이하지만 개별 국가 내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재산권이 규정되어 있고, 법적으로 부여된 재산권의 행사나 거래가 보호되며, 경제주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는 법정이 존재하고, 법정에서 합의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사법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국가 간에 사전적으로 합의된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국가 간에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의된 계약 이행을 강제할 사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제관계에서는 국내의 문제에서보다 무력에 의한 국가 간 자원 배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며, 무력 사용을 통한 전유와 착복(전쟁과 침략) 혹은 외부의 무력 사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전쟁)를 방어하는 활동(국방)이 국제관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협상 모형(bargaining model)에 관한 문헌은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국가 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작용하여 평화적 협상이 아닌 전쟁의 발발로 귀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aliga and Sjostrom 2013). 다시

말하면, 상대국이 실제로 얼마나 강한 상대인지에 대한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을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서로에 대한 정보를 완벽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적 협상으로 분쟁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가 A(부국)는 국가 B(빈국)가 분쟁을 고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전지출을 포함한 수교를 제안할 수 있다. 이전지출의 현금 송금, 에너지 및 식량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 등의 경제협력 사업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빈국이 생산적 투자와 비교했을 때 군사적 능력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대가 오히려 부국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는 빈국이 부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및 무역과 투자로 얻은 소득을 비교우위가 있는 군사적 부문에 전용한다면, 동태적으로 부국에 안보적으로 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Fearon(1996)은 약속 불이행 문제(commitment problem)가 또 다른 잠재적 전쟁 발생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약속 불이행 문제는 국제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앞서 서술한 대로 국제관계에서는 강력한 사법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이론 분석에 관한 문헌은 일국의 무역과 투자 결정에 대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협력이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 간 무역이 분쟁 및 전쟁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적(liberalistic) 시각의 문헌도 광범위하게 존재한다(Polachek 1980, 1992). Polachek(1980)은 국가 간 분쟁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서 분쟁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재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국가 간 무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가 국가 간 분쟁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Dorussen and Ward(2010)도 국가 간 무역 네트워크의 확대가 평화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분쟁이 교역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Li and Reuveny 2011). 그들은 Polachek(1980, 1992)의 모형의 바탕에서 분쟁이 교역 조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정을 다소 완화시켰다. 즉, 만약 분쟁이 수입재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수출재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면, 해당 국가는 무역 상대국에 분쟁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3. 소결

미국과 중국은 지난 50여 년간 외교 및 통상의 범위와 깊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이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온, 중국과 관여(engagement)하는 기존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혹자는 미중 관계를 신흥 강자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판단하며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곧 미중 분쟁이 결국 패권을 쥐려는 양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논문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Kurt and Sullivan(2019)은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 전략이 과거 미국-소련 냉전의 결론과 같은 결정적 종결 상태(definitive end state)가 아닌, 미국의 이해와 가치에 우호적인 조건(terms favorable to U.S. interests and values)들을 확보하며 중국과 공존(coexistence)하는 안정적 상태(steady state)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미중 공존 관계는 미국의 이해와 가치에 부합하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과의 '경쟁(competition)'의 요소도 있지만, 미중 간 불필요한 갈등의 고조를 막기 위한 '협력(cooperation)'의 요소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핵 확산, 유행병(팬데믹) 등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

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중국이 미소 냉전 시기 소련과 유사한 정치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지만, 냉전 시기 소련과 달리 현재의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외교적으로 더욱 세련되며, 이념적으로 더욱 유연함과 동시에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와 깊게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과 세계 경제의 깊은 통합 상태는 어떤 국가가 미국과 동조하는지 혹은 중국과 동조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 공산권 국가들을 봉쇄(containment)하던 정책을 현재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중 분쟁은 미국의 국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Ricardo가 지적했듯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 생산 및 교역은 각 교역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간 무역 확대로 후생이 증대된 경제주체들(winners)도 있는 반면 후생이 오히려 감소된 경제주체들(losers)도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권은 미중 간 교역 확대로 후생이 감소한 경제주체들(유권자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간 무역의 증대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가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정치경제학 문헌의 일관성 있는 분석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협상이론을 분석한 문헌은 국제관계에서 무역과 투자 결정에 대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협력이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제3장 경제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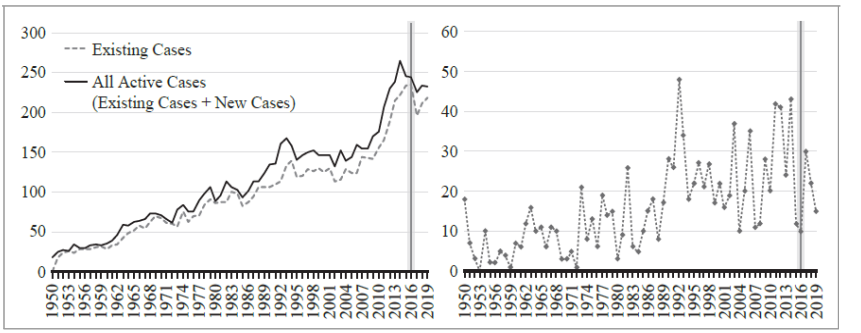
1. 경제제재의 정의와 개요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분쟁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예: 국가, 지역 공동체 등) 간에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경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경제제재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안이나 규제 등을 적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국제분쟁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이 분쟁의 중심에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3] 그리고 미국, 유럽 국가, 한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은 2022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며 전쟁을 일으키자 무역, 금융, 여행 제한 등 다방면에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경제제재로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것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하는 것에 비용을 증가시켜 이러한 행위를 철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3)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87, 2094(2013년), 2270, 2321(2016년), 2356, 2371, 2375, 2397(2017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2. 20).

그림 3-1. 경제제재의 집행 빈도 추이



자료: Kirilakha *et al.*(2021).

경제제재의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그림 3-1 참고). 경제제재는 무역 제재, 금융 제재 및 여행 제한 등의 수단을 동원해 경제제재를 가하는 국가(sender)가 경제제재를 당하는 국가(target)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제재는 크게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와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로 구분될 수 있다. 경제제재는 거의 대부분 정치체제가 독재체제인 국가에 사용되고 있으며, 표적제재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독재체제의 정치적 엘리트 계층에 국한되어 나타나도록 사용하는 제재이다. 주요 정치적 엘리트 계층의 해외 자산동결이나 여행제한 등의 조치가 그 예이다. 한편 포괄적 제재는 정치적 엘리트 계층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국민 대다수의 전반적인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제재이다. 핵심 에너지 자원의 수출입 제한이나 해당 국가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경제제재의 효과는 경제학과 정치학 영역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Drezner(2003)는 경제제재의 효과가 지난 문헌의 연구에서 과소 평가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는 경제제재가 실제 이행되기 전에 위협 수준(threat stage)에서 그 효과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며, 위협 수준까지 경제제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 경제제재의 효과가 문헌에서의 주요 분석 결과[4]보다 더 효과

적이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경제제재는 독재체제 국가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제재 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Wintrobe(1998)는 독재체재를 이론 모형을 통해 포괄적으로 분석했는데, Kaempfer *et al.*(2004)은 그의 모형을 기반으로 독재체재에 가해진 경제제재의 효과를 이론 모형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경제제재가 공공재의 공급을 감소시키고 반독재 세력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면, 경제제재가 독재자의 가용 예산과 권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였다. Oechslin(2014), Lektzian and Souva(2007), Allen(2008)도 이와 비슷한 분석 결과를 보였는데, 이들은 경제제재가 의도한 바와 달리 반독재 세력의 권한을 감소시켜 독재자의 권한이 더욱 증가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경제제재에 관한 이론 모형

본 절에서는 독재체재에 부과되는 경제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독재체제 국가(국가 A)와 독재체제 국가에 경제제재를 가하려는 국가(국가 B)를 상정한다. 국가 A의 주민은 정치적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두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국가 A의 지도자(독재자)는 국가의 경제적 자원 분배에 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가정한다. 국가 A의 지도자는 $x_A > 0$의 경제적 자원 중 민수용 자원(b_A)과 군사용 자원(g_A)에 배분하는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국가 A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예산 제약식을 지니고 있음을 상정한다.

$$g_A + b_A = x_A$$

4) Haufbauer *et al.*(1990); Pape(1997).

민수용 자원은 그것을 사용하는 경제주체들의 직접적인 효용을 증가시키며, 군사용 자원은 직접적인 효용과는 관계가 없으나, 타국에 대한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증가시키는 데 관여한다고 가정한다. 국가 A의 지도자는 민수용 자원(b_A)을 스스로를 위한 소비(c_A)와 정치적 엘리트 계층을 위한 소비(c_S), 일반 대중을 위한 소비(c_N)로 다시 분배한다. 본 모형에서는 오직 정치적 엘리트 계층만이 지도자에 대항하여 반란(revolution)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모형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 A의 지도자가 배분하는 일반 대중의 소비를 위한 민수용 자원의 양은 0이라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c_A + c_S = b_A$이다.

국가 B는 국가 A에 경제제재 부과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 B의 지도자도 국가 A와 같은 예산 제약식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즉, $g_B + b_B = x_B$). 요약하면 본 모형은 국가 A의 지도자, 국가 A의 정치적 엘리트, 국가 B의 지도자 세 명의 경제주체(player)를 상정한다.

본 모형의 경제주체들의 효용함수는 민수용 자원에 대한 선형함수를 상정한다. 앞서 서술했듯이, 군사용 자원은 경제주체들에게 직접적인 효용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국가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probability of winning)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다음과 같은 경쟁승리함수(contest success function)를 상정한다.

$$\rho(g_i, g_j) = \frac{g_i}{g_i + g_j}.$$

두 국가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각 국가는 $l_i > 0$만큼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입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두 국가의 민수용 자원을 전용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서술한 가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순차 게임(sequential-move game)을 상정한다.

- 1단계(경제제재): 국가 B가 국가 A의 총 경제적 자원을 $s \in [0, \bar{s}]$만큼 감소시키는 경제제재를 시행한다.

- 2단계(자원배분): 각 국가는 예산제약하에서 민수용(b_i)과 군사용(g_i) 자원 배분을 선택한다.

- 3단계(혁명): 국가 A는 민수용 자원 중 정치적 엘리트 계층의 소비를 위한 자원($c_S \in [0, b_A]$)을 분배한다. 만약 분배된 민수용 자원이 일정 임계점($\underline{c}$) 이하라면, 국가 A의 정치적 엘리트 계층은 국가 A의 지도자에 대항하는 혁명(revolution)을 시작한다. 혁명의 성공 가능성은 $\alpha > 0$으로 주어진다. 만약 혁명이 성공한다면, 국가 A의 지도자는 퇴진하며, 그가 생산한 군사용 자원도 제거되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변화한다.

- 4단계(협상): 국가 B는 국가 A에 군사용 자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t \in [0, b_B]$ 만큼의 이전 수입(transfer)을 제안한다. 만약 국가 A가 B의 제안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 A는 전쟁을 선포한다.

위의 주어진 정보는 경제주체들 간에 공유된 정보(common knowledge)임을 가정하며, 위의 게임을 푸는 해 개념(solution concept)은 완전부분내시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이다. 본 모형에 역진 귀납(backward induction)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해를 구한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 국가 A의 가용 민수용 자원과 이전 수입의 합($b_A + t$)이 국가 A의 전쟁으로부터의 기대효용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국가 B의

이전 지출(transfer) 제안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협상 제약식(appeasement constraint)을 도출할 수 있다.

$$b_A + t \geq \frac{g_A}{g_A + g_B}(b_A - s + b_B) - l_A.$$

국가 B는 위의 협상 제약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이전지출액을 국가 A에 제안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전지출액이 해로 도출된다.

$$t = \frac{g_A(x_B - s) - g_B x_A}{g_A + g_B} - l_A.$$

국가 B는 위의 이전지출액이 양(non-negative)이라면 위의 해로 계산된 액수를 제안할 것이며, 만약 음이라면 0을 제안할 것이다.

본 게임의 3단계에서, 국가 A의 정치 엘리트 계층은 혁명으로부터의 기대 보수(expected payoff)가 국가 A의 지도자로부터 분배받은 민수용 자원의 양보다 크다면 혁명을 시도할 것이다.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혁명 실패 시 정치 엘리트 계층의 보수는 0이라고 가정한다. 만약 혁명이 성공한다면, 국가 A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로 변경되며, 민주주의하에서는 민수용 자원을 정치 엘리트 계층과 일반 대중 계층이 공평하게 나누어 소비한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혁명 제약식(revolution constraint)으로 나타낼 수 있다.

$$c_S \geq \alpha \frac{b_A}{2}.$$

본 게임의 균형에서 국가 A의 지도자는 위의 혁명 제약식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양의 자원을 정치 엘리트 계층의 소비를 위해 분배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해가 도출된다.

$$c_S^* = \alpha \frac{b_A}{2}.$$

정리 1. 균형에서 국가 B는 게임의 1단계에서 국가 A에 가장 강한 수준의 경제제재를 가한다($s^* = \bar{s}$).

위의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 $g_A = 0$임을 가정해보자. 그러면 국가 B도 군사적 용도로 자원을 사용할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 B도 $g_B = 0$으로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국가 B가 군사적 용도로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가 A는 임의적으로 매우 작은 양을 군사적 용도로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x_B - s - l_A > 0$만큼의 이전 수입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만약 $x_B - s - l_A \leq 0$이라면, 국가 A도 자원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모형의 균형에서는 국가 B가 국가 A로 하여금 군사적 자원 사용의 유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다.

요약하면, 만약 $l_A \geq x_B - \bar{s}$ 일 경우에는 두 국가 모두 군사적 목적으로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가 A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충분히 작다면, 즉 $l_A < x_B - \bar{s}$ 일 경우에는 두 국가 모두 일정량의 경제적 자원을 군사적 목적으로 배분하게 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이전 지출(transfer) $t > 0$이 성립하며, 균형에서 협상이 타결되어 전쟁은 발발하지 않게 된다. 아래의 명제에서 본 게임의 균형을 표현한다.

$$t^* = \frac{g_A^*(x_B - s^*) - g_B^* x_A}{g_A^* + g_B^*} - l_A$$

명제 1. 국가 A의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충분히 작다고 가정하자($l_A < x_B - \bar{s}$). 이 게임의 완전부분게임내시균형의 1단계에서 국가 B는 국가 A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s^* = \bar{s}$)를 가한다. 2단계에서 각 국가는 다음과 같은 균형 전략(equilibrium strategy)을 사용한다.

$$g_A^* = \sqrt{\frac{2(x_B + x_A - s^*)g_B^*}{2-\alpha}} - g_B^*,$$

$$g_B^* = \sqrt{(x_B + x_A - s^*)g_A^*} - g_A^*.$$

3단계에서 국가 A의 정치 엘리트 계층은 $c_S < \alpha b_A/2$일 경우에 지도자에 대항하는 혁명을 시도하며, 국가 A 지도자의 균형 전략은 정치 엘리트 계층에게 $c_S^* = \alpha b_A/2$ 만큼의 민수용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4단계에서 국가 B는 국가 A에 다음과 같은 이전 지출을 제안한다.

$$t^* = \frac{g_A^*(x_B - s^*) - g_B^* x_A}{g_A^* + g_B^*} - l_A.$$

위의 명제에서 도출된 각 경제주체들의 균형전략을 풀면 다음과 같은 균형값(equilibrium outcome)이 도출된다.

$$g_A^* = \frac{4}{(4-\alpha)^2}(x_B + x_A - \bar{s}),$$

$$g_B^* = \frac{4-2\alpha}{(4-\alpha)^2}(x_B + x_A - \bar{s}),$$

$$c_S^* = \frac{\alpha}{2}\left(x_A - \frac{4}{(4-\alpha)^2}(x_B + x_A - \bar{s})\right),$$

$$t = \frac{2(x_B - \bar{s}) - (2-\alpha)x_A}{4-\alpha} - l_A.$$

위의 균형값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는 제재 당사국의 군사적 자원 (상대적) 사용량을 감소시키며, 정치 엘리트 계층에 분배되는 민수용 자원의 (상대적) 배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제제재가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고 반독재 세력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독재 정권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모형의 협상 단계에서 국가 간 협상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 지출에 관한 협상은 타결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므로 코즈의 이론(Coase theorem)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모형의 균형에서 경제제재는 가해지게 되는데, 이는 본 모형에서 경제제재가 협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제재는 코스의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Drezner(2003)가 주장한 것처럼, 제재가 협상의 대상이 된다면 위협 단계에서 합의가 도출되고 제재가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경제제재에 코즈의 이론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경제제재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면, 제재는 협상의 타결 유무와 관계없이 집행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코즈의 이론이 제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분쟁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예: 국가, 지역 공동체 등) 간에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경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경제제재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안이나 규제 등을 적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제제재는 대부분 독재체제 국가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제재 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경제제재가 의도한 바와 달리 반독재 세력의 권한을 감소시켜 독재자의 권한이 더욱 증가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모형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는 제재 당사국의 군사적 자원 (상대적) 사용량을 감소시키며, 정치 엘리트 계층에 분배되는 민수용 자원의 (상대적) 배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제제재가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고 반독재 세력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독재 정권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제4장 결론

미국과 중국은 지난 50여 년간 외교 및 통상의 범위와 깊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으나, 이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온, 중국과 관여(engagement)하는 기존의 외교정책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혹자는 미중 관계를 신흥 강자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으로 판단하며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는 곧 미중 분쟁이 결국 패권을 쥐려는 양 강대국 간의 전쟁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으로 귀결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논문에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Kurt and Sullivan(2019)은 미국의 대중 외교정책 전략이 과거 미국-소련 냉전의 결론과 같은 결정적 종결 상태(definitive end state)가 아니라 미국의 이해와 가치에 우호적인 조건(terms favorable to U.S. interests and values)들을 확보하며 중국과 공존(coexistence)하는 안정적 상태(steady state)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이러한 미중 공존 관계는 미국의 이해와 가치에 부합하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경쟁(competition)'하는 요소도 있지만, 미중 간 불필요한 갈등의 고조를 막기 위한 '협력(cooperation)' 요소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 핵 확산, 유행병(팬데믹) 등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중국이 미소 냉전 시기 소련과 유사한 정치체제와 이념을 갖고 있지만, 냉전 시기 소련과 달리 현재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외교적으로 더욱 세련되며, 이념적으로 더욱 유연함과 동시에, 중국의 경제는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와 깊게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과 세계 경제의 깊은 통합 상태는 어떤 국가가 미국과 동조하는지 혹은 중국과 동조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기 때문, 미국이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 공산권 국가들을 봉쇄(containment)하던 정책을 현재 대중 외교정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미중 분쟁은 미국의 국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Ricardo가 지적했듯이 비교우위에 입각한 특화, 생산 및 교역은 각 교역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이론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간 무역확대로 후생이 증대된 경제주체들(winners)도 있는 반면 후생이 오히려 감소된 경제주체들(losers)도 존재한다. 미국의 정치권은 미중 간 교역 확대로 후생이 감소한 경제주체들(유권자들)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 간 무역의 증대를 통한 경제적 상호의존성 증가가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정치경제학 문헌의 일관성 있는 분석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협상이론 분석을 다룬 문헌은 국제관계에서 무역과 투자에 관한 결정에 대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경제협력이 군사와 안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s)는 분쟁 상황에 놓인 경제주체들(예: 국가, 지역 공동체 등) 간에 한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 경제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경제제재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법안이나 규제 등을 적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친다.

경제제재는 대부분 독재체제 국가에 부과되기 때문에 정치체제와 경제제재 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 이들은 경제제재가 의도한 바와 달리 반독재 세력의 권한을 감소시켜 독재자의 권한이 더욱 증가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모형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제재는

제재 당사국의 군사적 자원 (상대적) 사용량을 감소시키며, 정치 엘리트 계층에 분배되는 민수용 자원의 (상대적) 배분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제제재가 공공재 공급을 감소시키고 반독재 세력의 영향력을 감소시켜 독재 정권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영문자료]

Allen, Susan H. 2008. "The Domestic Political Costs of Economic Sanctions." Journal of Conict Resolution, 52(6), pp. 916-944.

Baliga, Sandeep and Tomas Sjostrom. 2013. "Bargaining and War: A Review of Some Formal Models." Korean Economic Review, 29(2), pp. 235-266.

Caliendo, Lorenzo and Fernando Parro. 2022. "Lessons from U.S.-China Trade Relations." NBER Working Paper 30335.

Dorussen, Han and Hugh Ward. 2010. "Trade Networks and the Kantian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47(1), pp. 29-42.

Drezner, D. 2003. "The Hidden Hand of Economic Coerc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3), pp. 643-659.

Fearon, James. 1996. "Bargaining over Objects that Influence Future Bargaining Power." mimeo, Stanford University.

Hirshleifer, Jack. 1988. "The Analytics of Continuing Conflict." Synthese, 76, pp. 201-233.

Hirshleifer, Jack. 1991. "The Paradox of Power." Economics and Politics, 3(3), pp. 177-200.

Hirshleifer, Jack. 1994. "The Dark Side of the Force." Economic Inquiry, 32, pp. 1-10.

Hufbauer, Gary C., Je rey J. Schott, and Kimberly A. Elliott. 1990. *Economic Sanctions Reconsidered.* 2nd Edition,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Kaempfer William H., Anton D. Lowenberg, and William Mertens. 2004.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gainst a Dictator." Economics & Politics, 16(1), pp. 29-51.

Kirilakha, A., G. Felbermayr, C. Syropoulos, E. Yalcin,Andy. V. Yotov. 2021. *The Global Sanctions Data Base: An Update to Include the*

Years of the Trump Presi-dency. in the Research Handbook on Economic Sanctions, Edited by Peter A.G. van Bergeijk.

Kurt M. Campbell and Jake Sullivan. 2019.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 SEPTEMBER/OCTOBER, 98(5).

Lektzian, David, and Mark Souva. 2007. "An Institutional Theory of Sanctions Onset and Success." Journal of Conict Resolution, 51(6), pp. 848-871.

Li, Quan and Rafael Reuveny. 2011. "Does Trade Prevent or Promote Interstate Conflict Initia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48(4), pp. 437-453.

Oechslin, Manuel. 2014. "Targeting Autocrats: Economic Sanctions and Regime Chang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6, pp. 24-40.

Pape, Robert A. 1997. "Why Economic Sanctions Do Not Work." International Security, 22(2), pp. 90-136

Pierce, Justin R. and Peter K. Schott. 2020. "Trade Liberalization and Mortality: Evidence from US Coun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Insights, 2(1), pp. 47-64.

Polachek, Solomon W. 1980. "Conflict and Trad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1), 55-78.

Polachek, Solomon W. 1992. "Conflict and Trade: An Economic Approach to Political International Interactions", In: Walter Isard & Charles Anderton (eds) Economics of Arms Reduction and the Peace Process. Amsterdam: Elsevier, 89-120.

Wintrobe, Ronald.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Dictatorship*.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온라인 자료]

"Trump's Trade War With China Is Officially Underway." https://www.nytimes.com/2018/07/05/business/china-us-trade-war-trump-tariffs.html(검색일: 2022. 12. 23).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087, 2094(2013년), 2270, 2321(2016년), 2356, 2371, 2375, 2397(2017년). https://www.un.org/securitycouncil/sanctions/information(검색일: 2022. 12. 20).

[간담회 자료]

Schott. 2023. 전문가 간담회 자료.

Executive Summary

International Conflict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Implication for Economic Security

Youngseok Park

In this paper, I suggest a microeconomic foundation on the recent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addition, I review some formal models of international conflicts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conflict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Furthermore, I present a simple bargaining model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a dictatorship country, which are increasingly employed around the world in recent years.

〈책임〉

박영석

미국 Rutgers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ypark@pknu.ac.kr)

저서 및 논문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21)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공저, 2021) 외

KIEP 연구자료 발간자료 목록

■ 2022년

22-0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 김규판

22-02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 정형곤·이아라

22-03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Covid Multipolar World: Korea's Options / Shahid Yusuf and Danny Leipziger

22-04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평가와 시사점 / 김준동

22-05 중국의 녹색금융 발전전략과 주요 내용 / 문지영·이효진

22-06 방글라데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및 시사점 / 노윤재·김민희·김소은

22-07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 박지원·이예림

22-08 시진핑 3기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과제와 시사점: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 양평섭·김홍원

22-09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글로벌 규범 현황과 시사점 / 이천기

22-10 한-호주 공급망 협력 방향: 핵심광물과 수소를 중심으로 / 조승진·신민이

22-11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이철원·김초롱

22-12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대만 문제와 한국의 경제안보 / 허재철

22-13 국제사회의 성평등 무역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과제 / 오수현·고보민

22-14 최근 Mega FTA SPS 규범의 국제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강민지

22-15 무역 자유화와 소비자 후생효과: 품질 다양성을 중심으로 / 정 철·김봉근·정민철

22-16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 김은미·이성희

22-17 국제분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 경제안보에 대한 시사점 / 박영석

■ 2021년

21-01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 이현진·이철원·윤형준

21-02 디지털전환 시대의 국경 간 전자조달 논의동향과 시사점 / 박지현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1-03 미·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중 경제협력 방향 / 양평섭·최지원

21-04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 최유정·한하린

21-05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 조동희·오태현·이현진

21-0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연구 / 박혜리·박지현

21-07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박순찬

21-08 미국과 EU의 농업보조 변화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21-09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 조동희·장영욱·이현진·윤형준

21-10 인도네시아 탄소 중립 대응 정책과 한국의 그린뉴딜과의 협력 방안 / 이재호

■ 2020년

20-01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 김홍원·김주혜

20-02 일본의 개방형 혁신전략: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 정성춘

20-03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 박민숙·이효진

20-04 디지털세 논의에 관한 경제학적 고찰 / 이규엽·김현수

20-05 EU GDPR 위반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 이규엽·엄준현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References 22-17

International Conflicts and Economic Interdependence: Implication for Economic Security

Youngseok Park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최근 경제안보의 개념과 관련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2016년 무렵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미중 분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찾아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경제학적인 고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94320
9 788932 224992

ISBN 978-89-322-2499-2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